

소득, 지출 및 자산 충분성 분석을 통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Comparison of Financial Status of Employed Elderly Households
versus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wealth adequac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부 교수 정 순 희**
박사과정 김 현 정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Associate Professor : Joung, Soon-Hee
Doctoral Student : Kim, Hyun-Jung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financial status between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focused on income adequacy, expenditure adequacy and net wealth adequacy. Using data from 1997 KHPS, the lower financial status of the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Nine measures of financial status were used : income, per capita income, income-to-needs ratio, expenditure, per capita expenditure, expenditure-to-needs ratio, net wealth, net wealth-to-income ratio and net wealth-to-expenditure ratio.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had 68%~77% of income adequacy and 72%~83% of expenditure adequacy for employed elderly households. Holding for gender, age, education, earners in the household, living area and home ownership constant, although the gap was getting smaller,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were persis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unemployed-elderly households and the employed-elderly households can not be regarded as homogeneous group when public policies are developed.

▲ 주요어(key words) :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소득충분성(income adequacy), 지출충분성(expenditure adequacy),
자산충분성(wealth adequacy), 취업노인가계(employed elderly households),
비취업노인가계(unemployed elderly households)

1. 서 론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는 노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22년에는 14.3%로 고령사

회, 2030년에는 19.3%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0). 그러나 우리사회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은퇴시기를 늦추기는커녕,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 직업 안정성 약화로 인해 은퇴시기가 앞당겨지는 경향까지 보인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은퇴 이후의 여명이 과거에 비해 길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노인가계의 증가추세에 발맞추어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문숙

* 본 연구는 2001년도 이화여자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함

** 주저자 : 정순희 (E-mail : jsh@mm.ewha.ac.kr)

재·김순미·김연정, 1996 ; 성영애·양세정, 1997 ; 김순미, 1998).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비노인가계와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하거나 노인가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노인을 단순히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노인가계 내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을 간과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기존의 빈곤 노인층 뿐 아니라 실버소비자층을 형성하는 부유한 노인집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노인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경제구조를 가진 세부집단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미 외국의 몇몇 연구들은(Schultz, 1992 ; Zhong, Titus & Johnson, 1993) 노인가계가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연령이나 혼인상태의 구분 외에 은퇴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경제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퇴여부별로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게 된 두 가계간의 재정상태 비교는 은퇴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과대평가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과소평가의 우려 범하지 않게 할 수 있다(Zhong, Titus & Johnson, 1993 ; 김연정, 1998b에서 재인용).

따라서 고령화사회에서 은퇴시기가 너무 이른 것을 감안하여, 취업 여부에 따른 두 노인가계의 집단 간 재정상태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취업여부별 노인의 재정상태에 관심을 가진 선행연구들도(김연정, 1998 ; 양세정·성영애, 2001) 극소수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전반적인 재정의 충분성을 검토할 수 있는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총소득, 총지출, 순자산 뿐 아니라 가족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조정된 1인당 소득 및 지출, 요구 대비 소득비율 및 요구 대비 지출비율 그리고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지출 대비 순자산 비율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각기 다른 요구수준을 지닌 가계간의 재정상태를 절대적인 소득액과 지출액, 자산의 측정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재정상태를 측정할 때는 가계의 요구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Crystal, & Shed, 1990). 총가계소득과 총가계지출의 측정은 가계의 규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들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및 자산충분성 분석을 통한 재정상태의 분석은 다른 요구수준을 지닌 가계가 그 가계의 요구수준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소득 또는 지출수준에 있는지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노인집단 내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라 재정상태가 다를 수 있는 것은 은퇴 이후를 위한 은퇴 전 재무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노인집단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닌 취업여부별 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각기 다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노인가계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단순히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에 주된 관심을 두고 이루어졌으며(문숙재, 김순미, 김연정, 1996 ; 성영애·양세정, 1997 ; 임정빈·김윤희, 2000), 대부분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수립의 기초연구를 목적으로 행해졌다(문숙재·김순미, 1997 ; 김순미, 1998 ; 여운경, 1999). 물론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의 초기 연구로서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비교나 노인가계 자체의 분석만으로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인가계의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가계들 간에도 경제적 지위상 심각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노인집단 내의 세부 집단별 비교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지위는 근로소득유무와 관련되어 있어 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성영애, 1994)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비교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Moehrl(1990)은 노인의 취업여부에 따라 소비지출패턴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25%나 더 큰 소비규모를 보였으며, Rubin & Nieswaiaomy(1994)도 50세 이상의 노인가계를 대상으로 취업가계와 은퇴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소비지출패턴의 차이점을 규명한 결과, 노인의 취업여부가 소비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연정(1998b)이 1994년도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은퇴노인가계의 총소득은 취업노인가계보다 적으나 소비지출수준은 비슷하며, 자산은 은퇴가계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상태를 분석한 연구는 아니지만, 이윤금(1999)은 중회귀분석과 Tobit분석을 이용하여 기타 가계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외식비의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집단을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와 노인부부관계, 자녀동거 노인가계로 분류하여 노인가계의 경제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양세정·성영애(2001)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과 관련지을 때 노인가구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평가할 수 없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가구주의 취업여부에 따라 경제구조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비노인가계와 유사한 경제상태를 보이는 반면, 비취업노인가계는 취약한 경제상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측정방법별로 정리해 보면, 크게 재정자원의 유량 및 저장분석과 같은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과 재무율 분석, 재정자원 분포에 대한 불평

등도 분석의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소득, 지출의 유량과 자산과 부채 등의 저장 측정과 같이 절대액에 기초한 단순측정으로, 많은 선행연구들(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 김연정, 1998b ; 김순미, 1998 ; 양세정·성영애, 2001)이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반면 가계의 재정적 목표를 도달하게 함으로서 재정상태를 평가하고 상담하는데 유용한 객관적·상대적 측정방법인 재무를 측정방법은 외국에서는 소수의 연구들(Mason & Griffith, 1988 ; Prather, 1990 ; Lytton, Garman & Porter, 1991)이 초기적 단계에서 시도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재무를 분석만으로 이루어진 국내연구는 없으며, 유량 및 저장 분석과 함께 다양한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시도(김연정, 1998a ; 최윤지·최현자, 1998 ; 김순미, 1998)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불평등도 분석은 가계의 집단간 재정상태를 비교하는데 유용한 객관적·상대적 측정방법으로, 집단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성을 파악하기 위해 Lorenz곡선과 Gini계수를 이용한 방법(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 문숙재·김순미, 1997 ; 김연정, 1998b ; 김순미, 1998)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은 단순 절대소득액이나 지출액의 측정 뿐 아니라 가족의 규모에 따른 재정상태의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소득 및 1인당 지출도 분석할 것이며, 요구 대비 소득비율 및 요구 대비 지출비율과 같은 새로운 재무비율을 사용한 소득 및 지출의 충분성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자산 분석에 있어서도 기존에 사용된 불평등성 분석의 개념이 아닌 충분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충분성 등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는 1997년도에 실시된 제 5차 한국가구패널조사(KHPS)이다. 총 2,724가계

중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된 표본은 가구주가 55세 이상의 노인가계 824가계였다. 노인가계를 가구주 연령 55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고령자 고용촉진법(1991)과 통계청 조사에서 노인의 기준연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55세 정년제가 지속적으로 되어왔기 때문이다(김미혜, 1993). 또한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계를 취업 여부에 따라 세부집단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이 기준에 준해 노인가계를 분류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노인가계의 취업과 비취업의 구분은 가구주의 직업 종사상의 직위를 기준으로 하여,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농림수산업자, 비정규직 종사자의 경우는 취업가계(495가계)로, 미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가사, 연로의 경우는 비취업가계(329가계)로 분류하였다.

2. 측정도구

재정상태란 가계나 개인이 다른 가계나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현재와 미래 모두에 있어 생존과 심리적 복지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여가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측정도구에는 소득, 소비, 자산, 직업, 거주지, 인적 자본 등이 있다(이승신 외, 1996). 각각의 측정도구는 재정상태를 측정하는데 나름대로의 유용성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측정도구가 최선의 도구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측정도구에 따른 재정상태를 분석하였다.

1) 소득충분성 측정도구

가계소득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가계의 규모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가계의 규모에 따라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재정상태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다른 가계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가계소득을 통해 재정상태를 측정할 때는 조정변수가 필요하다. 특히 가족수(가족의 규모)는 재정상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화폐소득수만으로 재정상태를 비교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크기에 따른 재정상태의 차이를 조정하는 측정도구로 1인당 소득(per capita income)이 있다. 그러나 1인당 소

<표 1>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997년)

구 분	1인가구 (0.309)	2인가구 (0.534)	3인가구 (0.819)	4인가구 (1.000)	5인가구 (1.148)	6인가구 (1.265)	7인가구 (1.351)
대도시	253,179	436,718	669,409	817,775	939,142	1,034,596	1,104,802
중소도시	236,082	407,226	624,203	762,550	875,722	964,728	1,030,195
농어촌	205,261	353,948	542,712	662,999	761,396	838,782	895,702

* () 속의 수치는 가구균등화지수를 의미

* 원자료 : 박순일 외(1994).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997년 화폐가치로 환산

득은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을 가족원의 수로 나눈 것으로 이는 성인이나 자녀나 모두 똑같은 비율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규모의 경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아 가족원이 한 명 추가될 때의 한계비용이 이전의 가족원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비해 가구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를 고려한 경우에는 성인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1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 분배되는 소득의 비율은 1보다 작은 어떤 비율로 보아, 가족의 크기와 구성원의 특성도 모두 고려되는 측정도구이다. 예를 들어, Fichs' scale을 살펴보면, 성인의 가중치는 1, 두 번째 성인의 가중치는 0.8, 나머지 성인의 가중치는 0.7, 첫 번째 자녀의 가중치는 0.4, 다른 모든 자녀의 가중치는 0.3으로 보아, 규모의 경제가 자녀와 성인 모두에게 존재하여 한계적 비용도 고려되는 측정도구이다(Sabelhaus & Manchester, 1995).

본 연구에서는 가구균등화지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당 최저생계비로 소득을 나누어주는 개념인 요구 대비 소득비율(Income-to-needs ratio)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 비율은 가계의 규모와 가족구성원의 특성이 동시에 고려된 성인균등화지수가 적용된 최저생계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족의 규모만을 고려한 1인당 소득보다도 포괄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여러 가계의 각기 다른 소득이 최저생계비라는 공통분모를 사용한 비율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특성과 규모가 다른 두 가계의 소득 충분성을 비교 가능하게 한다. 즉 어떤 가계의 요구 대비 소득 비율이 1이라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비율이 커질수록 그 가계는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요구수준 파악을 위해 사용된 최저생계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4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자료³⁾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1997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였으며, 분석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구분의 농어촌은 군부지역으로 대체하여 이용하였다.

2) 지출충분성 측정도구

가계의 생산행동이 경제적 복지를 향유하기 위한 자원인 소득을 획득하는 행동이라면, 가계의 소비행동은 획득한 소득을 주 근거로 그 가계가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궁극적 목표인 경제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행동이다. 따라서 소비는 가계

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계가 소유한 자원으로 재화와 용역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것이며, 가계의 복지는 소비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 또한 소득의 변동보다는 소비지출의 변동이 적으며 소비지출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가계의 소비지출이 가계의 소득보다는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더 이상적인 측정도구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지출을 통한 재정상태의 측정도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계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가계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출충분성 측정도구로 가계소비지출 외에도 1인당 소비지출(per capita expenditure)과 가구균등화지수가 적용된 요구 대비 지출 비율(Expenditure-to-needs ratio)을 살펴보았다.

3) 자산충분성 측정도구

개별가계에 있어 순자산이란 주택, 주식, 채권, 기타 증권 등 모든 소유물의 총 가치(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뺀 것이다. 자산은 소득과 달리 저장의 개념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측정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산소득이라는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원천이며, 재화를 얻기 위해 화폐로 전환될 수도 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자산은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중요한 측정도구가 되며, 자원의 충분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측정도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은 물론 주택자산도 자산에 포함시켰다. 주택자산은 금융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재정상태 분석 시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Miller & Montalto, 1994).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택자산은 가계의 총 자산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노인가계의 경우 더 뚜렷하다. 또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주택의 순가치를 이용한 금융상품들을 사용하여 유동자산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여운경, 1999)에서 주택자산을 자산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다루는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wealth to income ratio)은 순자산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 이는 현재의 순자산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려준다. 이와 유사하게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wealth to expenditure ratio)은 순자산을 지출로 나눈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소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즉 소비지출액이 다른 가계에 비해 많아도 축적된 자산이 많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자산으로 인해 현재의 소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다른 가계와 같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해도 자산이 없거나 적으면 현재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은 매우 짧아질 것이다. 이때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은 개인의 순자산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현재의 소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은 한국노동연구원(1998)이나 한국노총(1999), 민주노총(1999) 등의 노동관련 기관 및 몇몇 개별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계측은 최저임금 측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일 뿐, 공식적 의미의 최저생계비를 계측한 것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1974, 1978)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89, 1994, 1999)에서 수행한 5회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공식적 의미의 계측으로 1989년이래 5년마다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계측년도에도 최저생계비 추정이 가능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3. 연구문제

취업 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집단간의 소득 충분성, 지출 충분성, 자산 충분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대한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상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 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취업여부가 두 집단의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표 2> 측정도구의 정의 및 측정

측정도구	정의 및 측정방법
소득 충분성	가계총소득 = 가계의 연간근로소득+가계의 연간비근로소득 = 급여소득액+상여금액+자영소득액+부업소득액+자산소득액+이전소득액+기타(만원)
	1인당 소득 = 가계총소득 ÷ 가구원수
	요구 대비 소득비율 = 가계총소득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지출 충분성	가계총지출 = 가계의 연간 총지출액(만원)
	1인당 지출 = 가계총지출 ÷ 가구원수
	요구 대비 지출비율 = 가계총지출 ÷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자산 충분성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만원) = (저축액+주식보유액+채권보유액+보험불입액+계불입액+사채준금액+주택보유가격)-(금융기관부채액+사채액+월부 및 외상액)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 = 순자산 ÷ 연간 가계총소득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 = 순자산 ÷ 연간 가계총지출

셋째,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두 집단간의 소득 충분성, 지출 충분성, 자산충분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 상대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소득 충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총소득, 1인당 소득, 요구 대비 소득 비율을, 지출 충분성을 위해서는 가계총지출, 1인당 지출, 요구 대비 지출 비율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산의 충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순자산,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을 측정하였다. 측정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간에

일반적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속변수의 경우 t-test를, 범주화변수의 경우 χ^2 를 실시하였다.

재정상태 측정도구별로 두 집단간의 평균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검증하고, 비취업노인가계 대 취업노인가계의 상대비율을 산출하였다. 상대비율은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어느 정도의 재정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t-test를 통한 두 집단간의 비율 산출은 다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요소와 취업여부의 영향력을 분리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로 얻은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다른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취업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 재무상태의 상대비율을 다시 구하였다.

모든 절차는 SAS PC Program(V. 8.1)에 의해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인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 노인가계에 대한 특성은 물론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로 분류하여 제시하였으며, 두 집단간 차이도 검증하였다.

전체 노인가계의 가구주 연령은 약 65세이며, 비취업노인가계의 경우 약 69세로 약 62세인 취업노인가계보다 유의하게 높다. 또한 가구주 연령을 5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이상 75세 미만, 75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비취업노인가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약 50%)에, 취업노인가계의 경우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약 72%) 집단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가구주 성별에 따라서도 여성가구주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약 38%)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어 취업노인가계(약 15%)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연수의 경우도 비취업노인은 평균 5.81년인 반면, 취업노인은 7.73년으로 나타나 비취업노인의 경우에 저학력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수도 비취업노인가계가 2.73명으로 취업노인가계(3.24명)에 비해 적었으며, 가족 내 소득을 벌어들이는 소득원수도 취업노인가계(1.59명)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0.77명)의 경우 유의하게 적었다.

거주지역을 대도시, 중소도시, 군부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도 두 집단간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소유에 있어서는 노인가계 대부분(약 81%)이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및 취업여부에 따른 두 집단간 비교

변수	집단	전체	비취업	취업	t-test /χ ²
		노인가계 (N=824) mean(s.d) /N(%)	노인가계 (N=329) mean(s.d) /N(%)	노인가계 (N=495) mean(s.d) /N(%)	
가구주 55~64 연령 65~74 75이상		450(54.61)	95(28.88)	355(71.72)	163.98***
	평균	64.87(7.21)	69.13(7.33)	62.04(5.55)	
가구주 남성 성별 여성		626(75.97)	205(62.31)	421(85.05)	55.99***
		198(24.03)	124(37.69)	74(14.95)	
교육연수		6.96(4.57)	5.81(4.75)	7.73(4.28)	5.90***
가족원수		3.04(1.62)	2.73(1.70)	3.24(1.54)	4.42***
소득원수		1.26(0.93)	0.77(0.81)	1.59(0.86)	13.76***
거주 대도시 지역 중소도시 군부지역		325(39.44)	137(41.64)	188(37.98)	6.24*
		272(33.01)	117(35.56)	155(31.31)	
		227(27.55)	75(22.80)	152(30.71)	
주택 자가 소유 임대		669(81.19)	257(78.12)	412(83.23)	3.39
		155(18.81)	72(21.88)	83(16.77)	

* P<.05 ** P<.01 *** P<.001

2. 연구문제의 분석

1)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가계의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을 측정할 위해 측정도구에 따라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측정 뿐 아니라 각각의 측정도구별 비취업노인가계 대 취업노인가계의 상대비율을 제시하였는데, 그 비율이 1일 때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가 같은 수준의 재정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즉 상대비율이 1보다 작으면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낮은 재정상태에 있으며, 1보다 크면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높은 재정상태에 있는 것이다.

연구결과 소득과 지출 부문에서 모두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가계의 요구수준에 따른 소득충분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측정도구인 요구 대비 소득비율에 있어 취업노인가계는 2.44의 수치를 보인 반면, 비취업노인가계는 1.83을 나타냈으며, 지출충분성을 나타내는 요구 대비 지출비율에 있어서도 1.87인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는 1.51로 나타나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충분성과 지출충분성 상태에 있음을 보였다. 총소득과 총지출에 있어서도, 취업노인가계가 연간 약 1,868만원과 1,404만원으로 비취업노인가계의 1,271만원, 1,010만원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 상대비율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각각 32%, 28%정도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였다. 가족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배제한 1인당 소득 및 지출이나 가족구성원의 균등화지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한 요구 대비 소득비율과 요구 대비 지출비율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약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및 상대비율

측정도구	비취업 노인가계 mean (s.d)	취업 노인가계 mean (s.d)	t-test	상대비율 (비취업/취업)
총소득(만원/년)	1271.10 (1431.70)	1868.60 (1700.70)	5.44***	0.68
1인당 소득(만원/년)	437.84 (346.54)	569.22 (417.52)	4.91***	0.77
요구 대비 소득 비율	1.83 (1.51)	2.44 (1.79)	5.27***	0.75
총지출(만원/년)	1010.10 (957.92)	1404.10 (1102.30)	5.44***	0.72
1인당 지출(만원/년)	363.63 (241.26)	438.35 (289.07)	4.02***	0.83
요구 대비 지출 비율	1.51 (1.02)	1.87 (1.21)	4.65***	0.81
순자산(만원)	9689.90 (16662.00)	9583.60 (13415.00)	-0.09	1.01
소득대비순자산 비율	10.15 (12.55)	7.16 (8.68)	-3.74***	1.42
지출대비순자산 비율	10.97 (12.67)	8.30 (9.53)	-3.23**	1.32

** P<.01 *** P<.001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경우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대비율도 1.01로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며, 따라서 은퇴 전 충분한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노인가계가 은퇴 후 소득의 상실로 인해 급격히 재정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유중인 자산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소비지출수준을 어느 정도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이나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은 취업노인가계가 7.16년과 8.30년을 보인 것에 반해 비취업노인가계가 10.15년과 10.97년으로 나타나, 비취업노인가계가 더 높

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도 두 집단이 같은 수준의 순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현재의 소득수준과 지출수준이 모두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더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인구통계학적 변인이 각 재정상태 측정도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두 집단간 재정상태를 측정도구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고 그 평균에 따른 상대비율을 구하는 것은 취업 이외의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도 보이듯이 취업노인가계가 비취업노인가계에 비해 가구주의 연령도 더 낮고, 가족원수와 소득원수도 많으며 학력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취업노인가계에 여성가구가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취업여부 이외의 다른 변수들도 가계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취업여부에 따른 재정상태의 측정 및 비교는 많은 영향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효과를 취업여부의 효과로 과대평가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간 재정상태의 차이에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영향력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고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취업 여부에 따른 비취업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순수한 재정상태의 차

이만을 보고자 하였다.

<표 5>에 각각의 재정상태 측정도구를 종속변수로, 가구주 성별, 연령, 교육연수, 소득원수,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취업 여부를 독립변수로 놓고 중회귀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의 취업여부가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순자산에 유의하게 부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보면, 순자산에서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총지출에서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인당소득, 요구 대비 소득비율, 1인당 지출, 요구 대비 지출비율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가구주 노인가계의 경우 단독 노인가계가 많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라 조정된 측정도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재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준 집단인 65세 이상 75세 미만 가계에 비해 55세 이상 65세 미만 집단에서 총지출은 높으며,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과 지출 대비 순자산 비율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집단이 미래에도 현재 수준의 소득과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해야 하거나 현재의 소비수준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연수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족내 소득원의 수도 순자산을 제외한 모든 측정도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원수는 소득과 지출부문에서는 정적으로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과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에서는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표 5> 재정상태 측정도구별 중회귀분석 결과

	연 간 총소득	1인당 소득	요구대비 소득비율	연 간 총지출	1인당 지출	요구대비 지출비율	순자산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
독립변수	coefficient								
여성(남성)@	-41.45	121.03***	0.36**	-143.76+	68.93**	0.16+	-2618.64*	0.20	0.12
연령(65-74)@									
55-64	156.88	10.51	0.06	163.95*	22.51	0.10	-1057.32	-3.00***	-3.30***
75이상	101.30	13.31	0.03	67.67	16.49	0.03	-582.09	-1.77	-1.52
교육연수	92.31***	31.01***	0.13***	61.09***	20.85***	0.09***	826.48***	0.23*	0.32***
소득원수	948.65***	122.26***	0.65***	595.93***	55.23***	0.34***	330.85	-2.37***	-1.85***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283.73**	-54.31	-0.07	-262.34***	-57.64**	-0.11	-1592.17	-0.77	-0.54
군부지역	-319.03**	-128.35***	-0.06	-238.28**	-78.70***	0.05	-1921.87	0.01	-0.53
자가(임대)@	34.00	13.82	0.05	-59.54	-17.67	-0.08	7193.80***	7.19***	8.01***
비취업(취업)@	-403.00***	3.93	-0.13	-292.88***	2.39	-0.10	-2537.74*	-0.93	-1.00
intercept	102.58	150.10	0.39	384.35	216.21	0.72	1488.71	6.45	5.84
R2	0.42	0.27	0.27	0.44	0.21	0.22	0.13	0.16	0.15
F Value	64.54***	33.18***	33.63***	70.65***	24.40***	26.16***	13.22***	16.73***	15.71***

+ P<.1 * P<.05 ** P<.01 *** P<.001

@ 가변수화

반면, 교육연수는 모든 측정도구에서 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에 따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총소득, 1인당 소득, 총지출, 1인당 지출에 있어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계에 비해 중소도시나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계의 경우가 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에 있어서는 더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역에 따른 가구균등화지수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요구대비 소득비율이나 요구대비 지출비율의 경우는 어떠한 유의한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순자산 및 소득/지출 대비 순자산비율 등 자산 충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택소유여부의 경우, 소득이나 지출 충분성에 있어서는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은 반면, 자산충분성에서는 자가를 소유한 노인가계가 그렇지 않은 노인가계에 비해 매우 유의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에서도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 노인가계의 경우 주택자산이 자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다.

3)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통제된 후의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여부 이외의 독립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산출한 두 집단간 재정상태 상대비율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을 제외한 취업여부별 재정상태의 상대비율

측 정 도 구	독립변수 '비취업'의 회귀계수	취업노인가 계의 평균값	상대비율 (비취업/취업)
총소득(만원/년)	-403.00	1868.60	0.78
1인당 소득(만원/년)	3.93	569.22	1.01
요구 대비 소득 비율	-0.13	2.44	0.95
연간총지출(만원/년)	-292.88	1404.10	0.79
1인당 지출(만원/년)	2.39	438.35	1.01
요구 대비 지출 비율	-0.10	1.87	0.95
순자산(만원)	-2537.74	9593.60	0.74
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	-0.93	7.16	0.87
지출 대비 순자산 비율	-1.00	8.30	0.88

이전의 <표 4>에서 구한 상대비율은 취업여부별 두 집단간 재정상태 측정도구의 평균을 이용하여 비취업노인가계의 평균/취업노인가계의 평균을 구한 비율이라면, <표 6>에서 구한 상대비율은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회귀계수(coefficient)를 이용한

비율로,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순수하게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만을 계산한 비율로 자세한 산식은 다음과 같다.

$$\hat{Y}_i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n X_n$$

여기서 X_1, X_2 등이 각각의 독립변수이며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은 가변수 0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에 비취업의 경우만 위의 회귀식에 1로 대입하게 되고, 각각의 독립변수 위치에 그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예측된 비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값은 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값 + 독립변수 '비취업'의 예측된 회귀계수로 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상대비율은 (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값 + 비취업의 회귀계수)/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값 즉, 1+회귀계수/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값으로 계산될 수 있다.

기타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취업여부에 따른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상대비율은 1인당 소득과 1인당 지출에서만 1.01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측정도구에서는 모두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음을 보였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출, 순자산에서는 상대비율이 각각 0.78과 0.79, 0.74로 나타나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대비 소득 비율과 요구대비 지출비율과 같이 가족수와 지역이 조정된 변수에서는 0.95로 그 차이가 감소하기는 하지만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소득충분성이나 지출충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상대비율과 <표 6>의 상대비율을 비교하면, 소득충분성 측정도구와 지출충분성 측정도구에 있어서 0.68~0.83에서 0.78~1.01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총소득은 0.68에서 0.78로, 1인당 소득은 0.77에서 1.01로, 요구 대비 소득 비율은 0.75에서 0.95로, 총지출은 0.72에서 0.79로, 1인당 지출은 0.83에서 1.01로, 요구 대비 지출비율은 0.81에서 0.95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산충분성 측정도구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기타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되기 전에는 자산충분성을 측정하는 3개의 도구에서 모두 비취업노인가계보다 비취업노인가계가 1%~42%정도 더 높은 비율을 보였었는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이후에는 12%~26%까지 더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김연정, 1998b)에서 취업노인가계보다 비취업노인가계가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다는 결과는 순수하게 취업여부의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의 복합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소득이나 지출 부문 뿐 아니라 자산 부문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낮은 재정상태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취업여부는 노인가계의 전반적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노인가계의 재정상태를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로 구분하여 두 집단간 상대비율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득충분성, 지출충분성, 자산충분성을 나타내는 측정도구들에서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의 평균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총소득과 총지출액은 비취업노인가계가 유의하게 적었으며, 상대비율도 비취업노인가계가 각각 32%, 28%정도 취업노인가계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을 보였다. 가족원수에 따라 조정된 1인당 소득/지출이나 가족구성원의 균등화지수와 거주지역에 따른 요구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된 요구 대비 소득/지출 비율의 경우 그 비율의 차이가 약간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두 집단간 차이는 여전히 나타났다.

반면 순자산의 경우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대비율도 1.01로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소득 대비 순자산비율이나 지출 대비 순자산비율은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 재정상태를 측정도구별 평균으로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성별, 가족원수나 소득원수, 교육연수, 거주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에서도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노인가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두 집단간 재정상태 측정도구별 평균의 차이는 이러한 취업 외의 변수들에 의한 복합 효과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모든 변수들과 취업여부를 독립변수로, 9가지 재정상태 측정도구를 종속변수로 놓은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성이 가구주에 비해 여성가구주가에게,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소득원수가 적을수록, 소도시에 거주할수록 전반적으로 재정상태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비취업노인가계의 총소득, 총지출, 순자산에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

셋째,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얻어진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순수하게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간 재정상태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른 독립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의 상대비율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여전히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영향력이 포함되었을 때와는 달리, 소득이나 지출 충분성에서 뿐만 아니라 자산충분성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측정도구별 평균 비교시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는 결과는 취업여부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의 복합적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만 분석하면 소득이나 지출 부문 뿐 아니라 자산 부문에서도 비취업노인가계가 취업노인가계보다 더 낮은 재정상태에 있음을 알려준다.

본 연구는 노인가계를 기존의 개념처럼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부양집단으로 단정지를 것이 아니라 노인가계 내에서도 다양한 세부집단이 있으며, 취업여부에 따라 노인가계 내에서도 다른 재정상태에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비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가 취업노인가계의 재정상태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음을 보인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 가계 스스로 은퇴 이후를 위한 은퇴 전 재무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 수립 시 취업여부별 또는 취업가능성에 따라 각기 다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비취업노인가계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비노인가계나 취업노인가계에 비해 소득이 낮고 그에 따라 복지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비취업노인가계의 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 저축 등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며, 둘째 은퇴자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및 경로 연금제도 등 적극적 공적부조를 통해 소득보장을 내실화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의 측면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은퇴의 시기를 늦추거나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서, 노인스스로의 소득능력을 배양시키고, 노인에 대한 사회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안인 연금 등 은퇴자산 마련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연금제도와 활성화되어 연금이 은퇴 후 주된 수입원으로 작용하지만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1988년 시작되어 정상적인 연금의 지급은 2008년에 실시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사람은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2008년에 연금을 받는다 해도 그 액수가 20년 가입기간의 평균보수의 40% 수준으로 연금만으로는 노후에 필요한 소득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박민서, 1998). 또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공적부조제도는 부양자수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사회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반면 노인 취업은 물질적인 생산성 뿐 아니라 사회적·심리적 생산성까지 제고하여 준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취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55세를 전후로 노동시장을 떠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정년기준을 노령화사회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연공가급적 보수체계에 대한 재정

적 부담 및 노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55세 이후 연공가급분의 보수가산을 중단하고 능력급에 의해서만 보수가 지급되어 기업 측의 부담도 줄이고 유희노동력인 노인의 취업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재취업을 위해 노인자신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자신의 새로운 직업능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며, 과거의 직책이나 보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현실적 입장을 수용하는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고령자 적합 직종을 새로이 개발하고 확대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까지 77개의 직종을 개발하여 이 직종에 노인의 우선취업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전문기술직종의 수는 대단히 적은 편이고, 선정 직종이 노인에게 적합하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기업 측에 대한 설득력이 미약하다(최성재, 2000).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4일

【참 고 문 헌】

-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 김연정(1998a). 노후준비의 관점에서 본 가계재정상태의 구조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연정(1998b).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 문숙재·김순미(1997)의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5), 1-16.
- 문숙재·김순미·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박민서(1998). 고령화사회의 노인취업실태와 바람직한 방향. 한국사회정책 5(1), 313-351.
- 박순일 외(1994).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성영애(1994). 미국 은퇴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4), 31-43.
- 성영애·양세정(1997)의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8.
- 양세정·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 여윤경(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41-59.
- 이윤금(1999). 노인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 및 관련요인 분석 : 취업노인가계와 비취업 노인가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73-86.
- 이승신·김기욱·김경자·심영·정순희(1996). 가계경제학. 서울: 학지사.
- 임정빈·김윤희(2000).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득·소비지출 비교 : 1982~1998.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163-176.
- 최성재(2000). 노인취업의 실태와 정책방향. 노인복지정책연구 통권 17호, 7-41.
- 최윤지·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통계청(2000). 연령별 추계인구. www.nso.go.kr.
- Cara, J.M. & Catherine, P.M.(1994). Comparison of Economic status of Elderly household : Nonmetropolitan verse Metropolitan Residence, *Family Economics and Nutrition Review* 11(4), 19-30.
- Crystal, S. & Shed, D.(1990). The economic well-being of elderl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6(3), 227-247.
-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2, 3-24.
- Mason, J.W & Griffith, R.(1988). New ratios for analyzing and interpreting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the Institute of Certified Financial Planners*, 71-87.
- Moehrle. T.(1990). Expenditure Patterns of the Elderly : Workers and Nonworkers, *Monthly Labor Review*, 113(5), 34-41.
- Prather, C.G.(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 53-69.
- Rettig, K.D., Christensen, D.H. & Dahl, C.M.(1990), *Income equivalence calculations for divorce decisions*. In M. Carsky, Ed. Proceedings of the American Council of Consumer Interests, 50-56.
- Rubin, R. & Nieswaiadomy, M.(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onretired Person, *Monthly Labor Review*, April, 10-21.
- Sabelhaus, J. & Manchester, J.(1995). Baby boomer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791-806.
- Schultz, J.H.(1992). *The Economics of Aging*, 5th(ed), Auburn House.
- Zhong, L.X., Titus, P.M. & Johnson, D.P.(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 of ACCI* 39, 74-81.